

비상경제장관회의
22-4

민간 · 기업 · 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
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

2022. 6. 23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I. 검토 배경	1
II. 그간 규제혁신 평가	2
III. 향후 추진전략	3
1. 기본 방향	3
2. 추진체계	4
3. 추진과제 선정 기준	6
IV. 향후 추진일정	7

I. 검토 배경

- ◇ 규제혁신은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새정부 핵심과제
 -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마음껏 발휘되는 **민간 중심의 역동경제** 실현을 위해 신속·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

① 기업 발목 잡는 **모래주머니 규제** → 투자·일자리 창출 제약

- 그간 기업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핵심 규제가 유지되거나 강화
→ 기업활동 저하 및 시장경제 기능 위축
- 기업 투자·일자리창출 부진은 **성장잠재력 저하**로 이어질 우려

② 전통 제조업·공급자 중심의 규제 체계 → 新산업 육성 저해

-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혁신·신기술 발전에 따라 新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규제개선을 추진 중

(美) Wait and See 전략(최소규제 우선 적용 + 점진적으로 필요한 규제 확대)
(獨) 모든 규제 초안('17) 및 진행 중인 규제협약과정('18)을 공개
(英) The Regulatory Horizons Council(민간자문기구)을 통해 신산업 규제를 선제 발굴('20)
(佛) 규제 1개 신설시 규제 2개를 폐지하는 one-in, two-out 제도 도입,
EU입법 도입시 EU가 정한 요건 이상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('17)

- 반면, 우리는 전통적인 제조업·공급자 중심의 규제체계 유지
→ 새로운 제도 도입이 지연되며 기업들의 혁신활동을 제약*

* 100대 글로벌 스타트업 중 Didi Chuxing(자가용의 유상운송), Warby Parker(온라인 안경판매) 등 31개가 국내 규제 저촉가능성('19.8, 아산나눔재단)

③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등 **환경변화** → 규제혁신의 적기

-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화 추세, 기술 발전속도 가속화 등으로 인해 규제개혁을 둘러싼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
- 이러한 **환경변화**를 계기로 과거 이해관계자 반발에 막혀 개혁하기 어려웠던 규제도 국면전환의 가능성 확대*

* (예) 그간 이해관계자 반발이 컸던 비대면진료 관련 여론이 코로나19 이후 전환 추세

Ⅱ. 그간 규제혁신 평가

① 개수 위주의 양적 성과 → 실질적인 현장으로 해소는 미흡

-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개선보다는 규제정비 전수 위주의 정책 추진 → 규제개선 체감도 저조
 - 인·허가 심의, 과도한 주민동의 요구 등으로 대규모 투자 추진이 중단·지연되는 '현장 대기 프로젝트'도 증가
- 환경·입지 등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핵심규제는 유지·강화
 - * 기업투자 저해규제(한경연, '22년): 고용 및 노동(35.3%), 인허가 심의(29.4%), 환경(17.6%), 신사업진입(11.8%), 토지(5.9%) 順

② 시장보다 더딘 규제개선 → 新산업 창출에 한계

- 규제·제도가 시장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, 보건·의료 등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제약*
- * 최근 'CES 2022'에서 우리기업이 만든 제품이 CES 혁신상 139개(전체의 22.3%)를 수상했으나, 일부는 규제로 인해 국내사업화에 곤란

③ 갈등해소에 주도적 역할 미흡 → 유의미한 성과 도출에 한계

- 전문직역군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가치가 상충하는 규제들은 성역화되어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

④ 규제의 복잡·덩어리화에도 불구하고, 추진체계 미흡 → 추진동력 약화

- 최근 산업·기술간 융복합 가속화로 인해 규제 영역도 복잡·다부처화(덩어리규제화)되고 있으나, 규제대응은 사실상 개별부처에 의존*
- * 부처별 규제개혁법무담당관(과장급) 및 자체 규제위가 개선과제 발굴·정비 수행
- 부처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범부처적 규제혁신 추진체계 미흡 → 규제 방치 지속

☞ 수요자(민간) 중심의 강력한 규제개선 추진체계 구축 필요

Ⅲ. 향후 추진전략

1 기본 방향

◇ 4大 기본원칙* 下에 체계적 규제혁신 전략 수립·추진

* ①체감도 ↑, ②신속 추진, ③Win-Win形 개선, ④강력한 추진체계 구축

- ① (체감도 ↑)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검토
 - 국민 안전·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
 - 안전·환경 문제 등 전면 폐지가 곤란한 규제는 피규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대안 마련
- ② (신속 추진) 단기간 내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
 -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금년 중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추진
 -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 해결 → 성공사례 (Best Practice)가 이해관계가 참여한 과제로까지 확산되도록 유도
- ③ (Win-Win形) 갈등조정 메커니즘, 인센티브 등을 활용하여, 이해관계자 모두 'Win-Win'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추진
 - 이해관계가 참여하게 대립하는 과제는 강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갈등조정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론화 추진
 - 제도의 법제화 등 조정·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는 한편, 이익 공유 기제(상생협력펀드 등)를 활용한 이해관계자간 합의 유도
- ④ (강력 체계)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
 -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범부처 규제혁신 추진 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모든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 추진
 - 쏠부처가 규제혁신의 주무부처라는 인식下에 소관 규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추진
 - 규제혁신 성과에 따라 부처 정부업무평가 반영 확대 또는 예산상 인센티브 부여(포상금 등) 방안도 검토

2 추진체계

◇ 범부처 「경제 규제혁신 TF」를 신설하고
6대 분야 작업반과 민간 중심의 경제규제심판부 구성·운영

① (규제혁신 TF) 경제분야 규제혁신의 총괄·조정을 위한 협의체

- (구성) 경제부총리(주재), 경제부처 장관,
민간 전문가(학계·경제단체 등 현장 전문가) 등
 - 규제혁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
민관 공동 팀장으로 운영
- (기능) 핵심규제 개선안 발표*, 부처간 핵심 쟁점사항 조정 등
 - * 각 작업반의 주관부처 장관이 작업반의 성과를 발표하도록 하여 책임성 강화
 - 분야별·과제별 주요 규제혁신 성공사례(Best Practice) 및
추진상황 등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보고
- (개최시기) 월 1회 + 필요시 수시 개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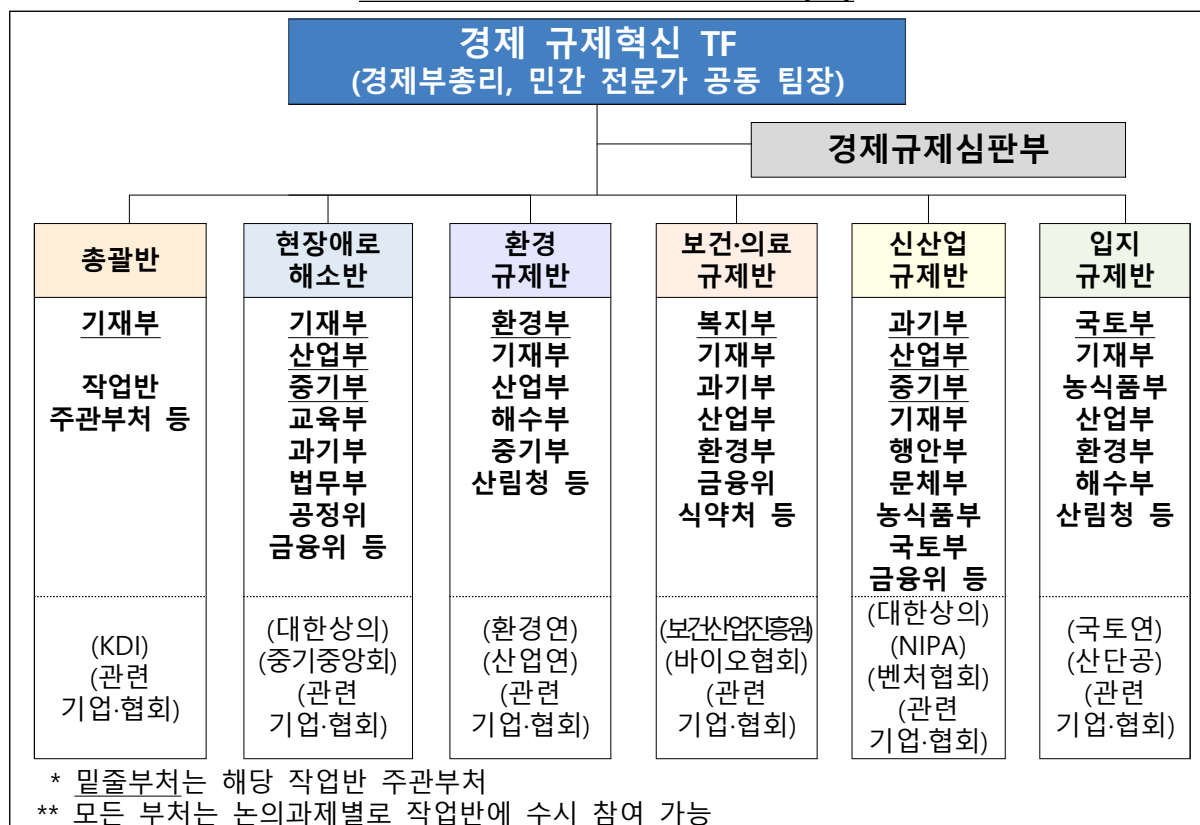
② (작업반) TF는 ①현장애로, ②환경, ③보건·의료, ④신산업, ⑤입지 규제와 함께 ⑥인증제도, ⑦그림자규제 등 핵심규제 개선 추진

- ① (분야별 작업반) ①과제별 개선안 마련, ②추진계획 수립,
③이행상황 점검 등
 - (구성) 작업반장(주관부처 차관), 관계부처 1급,
민간 전문가(기업·학계 등)
 - (개최시기) 수시 개최 → 회의결과 총괄반과 공유
- ② (총괄반) ①각 작업반 진행상황 점검, ②쟁점사항 논의·조정,
③인증제도 및 그림자규제 개선 총괄 등
 - (구성) 기재부 1차관(주재), 작업반별 반장(차관),
민간 전문가(기업·학계 등)
 - (개최시기) 격주 개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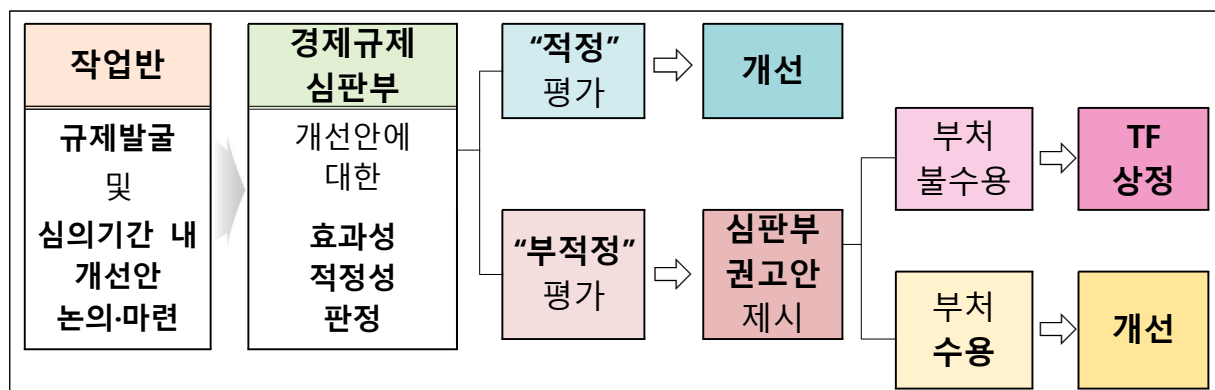
③ **(경제규제심판부)** 민간·현장의 시각에서 분야별 작업반이 마련한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성, 적정성 판정

- **(구성)** 과제별로 민간 전문가(다수)와 공무원으로 구성
 - 기업·협단체, 학계·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심판관 pool을 구성하여, 과제별로 심판관 배정
- **(기능)** 작업반에서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적정 또는 부적정 판정
 - 부적정 판정시 권고안 제시 → 부처 불수용시 TF 상정·논의

< 「경제 규제혁신 TF」 조직도(안) >



< 규제개선 흐름도 >



3 추진과제 선정 기준

◇ 중요규제 선정기준에 따라 추진과제 우선 선정
→ 규제성격에 따라 Two-track 추진(①즉시개선 추진, ②추가 추진)

1 중요규제 선정기준

- ① **수요자 중심**의 성과 체감형 과제인지 여부
 - 기업, 경제단체, 언론 등 지속 건의가 있었던 과제
- ② **전방위적인 혁신**을 유도하는 과제인지 여부
 - 해당 분야 및 전후방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과제
- ③ **효과성·안전성** 등이 既검증된 과제인지 여부
 -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규제완화 등으로 충분히 검증된 과제

2 선정 과정

- 경제단체 등을 통해 건의된 과제, 규제개선을 기 추진하였던 과제, 각 부처에서 자체 파악한 과제,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등을 대상으로 검토
- 기업·경제계·연구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 추가 발굴

※ 기업 : 투자 계획 추진에 애로를 가진 기업들을 중점 발굴하여
소통 강화 및 애로 해소 추진

* ①규제권한의 지방이양, ②기업규모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규제 개선, ③그림자규제 개선 등
새경정 과제 → 부처별 TF서 우선 논의 경제분야 중요규제 분류시 경제 규제혁신 TF서 논의

3 추진 방식 : 선정된 과제는 “Two - track” 으로 추진

- ① 단기간 내 규제개선 가능한 과제는 즉시 개선방안 마련, 추진
- ② 부처협의, 이해관계자 소통 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
심의기간(예: 90일) 내 결론 → 경제규제심판부 판정 등 통해 추진

Ⅳ. 향후 추진일정

◇ 6.23(木) 「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」 발표 + 6개 작업반 가동
→ 7월 중 첫 번째 성과물을 신속히 도출

- ① (6.23일) 2차 「비상경제장관회의」 회의(경제부총리 주재) 개최
 - 「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」 확정·발표
 - 새정부 출범 이후 부처별 TF 규제혁신 추진경과 보고
- ② (6.23~7월 초순) 6개 작업반 회의 개최 + 경제규제심판부 구성·운영 + 현장 소통
 - 단기간 내 개선가능 과제는 조속히 개선방안 확정 및 세부 실행계획 마련
 - 여타 과제는 작업반 회의 등을 통해 추진방안 논의
 - 최근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10대기업 방문 등 현장소통 강화 → 추가 과제 지속 발굴
- ③ (7월 중순) 1차 「경제 규제혁신 TF」(경제부총리 주재) 개최
 - 단기간 내 개선가능과제의 개선방안 발표 + 주요 성과사례(Best Practice) 발굴 →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상정 안건 마련
 - 여타 과제 논의 진행상황 점검